



# 세계 경제의 과도한 부채와 저성장 위험

최 원 선임연구원

■ 제네바 보고서<sup>1)</sup>에 따르면, 과도한 수준의 부채 규모와 저성장 지속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deleveraging)<sup>2)</sup>에 대한 논의가 지속해서 이루어졌으나, 전 세계 GDP 대비 부채<sup>3)</sup> 비율은 2008년 174%에서 2013년 212%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 선진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13년 272%로 2008년 대비 25%p 상승하였으며, 신흥국은 2013년 151%로 2008년 대비 36%p 상승함.
- 전 세계적으로 부채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잠재 GDP 성장률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늘어나는 이자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금융기관 부채와 민간부채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었으나, 선진국 공공부채와 신흥국 민간부채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선진국 금융기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임.
- 선진국의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신흥국의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2008년 72%에서 2013년 102%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 그러나 2013년 미국, 일본, 그리고 유로존 국가들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각각 105%, 243%, 93%로, 대부분 선진국들이 100%를 상회하거나 육박하는 높은 수준을 나타냄.

1) Luigi Buttiglione, Philip R. Lane, Lucrezia Reichlin and Vincent Reinhart(2014, 9), 'Deleveraging? What Deleveraging?', "Geneva Reports on the World Economy", ICMB.

2) 디레버리징은 레버리징과 반대 의미로 부채를 축소하는 것을 말함.

3) 금융기관을 제외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부채를 의미함.

〈표 1〉 2013년 주요국 GDP 대비 부채 비율

(단위: %)

구분	선진국	미국	일본	유로존	한국	신흥국	중국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108	105	243	93	37	48	49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	164	160	168	164	196	102	168
GDP 대비 부채 <sup>1)</sup> 비율	272	264	411	257	232	151	217

주: 1) 금융부문을 제외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부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자료: Luigi Buttiglione, Philip R. Lane, Lucrezia Reichlin and Vincent Reinhart(2014), p. 12 인용.

■ 주요 선진국들은 과도한 공공부채가 장기적으로 자국 경제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적정 수준의 공공부채 유지를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

- 미국은 2014년 10월 말에 완전한 경기 회복세 달성을 전제로 양적완화 정책을 종료할 것으로 보이며, 양적완화 종료 이후 공공부채 관리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 공공부채 축소를 위하여 2014년 4월 소비세를 인상하였으며, 2015년에는 추가적인 소비세 인상이 예정되어 있음.
- 유로존 국가들의 경우 경기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먼저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빠른 시일 내에 경기회복세가 공공부채 축소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중국의 경우 최근 과도한 지방정부 부채 등이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부채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 발전의 속도 조절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낮고 단기간 내에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향후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해 보임.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013년 기준 37%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sup>4)</sup>, 증가 속도는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하여 빠른 편에 속함.
- 우리나라 총 가계부채 규모가 약 1,000조 원에 이르고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낮은 수준의 연체율과 고신용·고소득 차주를 중심으로 한 증가세 등으로 단기간에 부실화될 위험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sup>5)</sup>

4) 4대 연기금 부채와 공기업 부채를 포함할 경우에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주장도 있음.

5) 한국은행(2014. 9),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참조.

■ 제네바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상승에 따른 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국가별로 적절한 재정정책과 거시적인 경제정책 등이 유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 부채가 급증한 국가들의 경우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저금리 유지가 요구됨.
- 그러나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전 세계적인 금리 상승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에는 어려움.
- 따라서 일부 선진국들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는 유로존 국가들의 경우 빠른 경기 회복세 달성을 위하여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함.

(ICMB, FT 등)